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살기 좋은 동네방네

기도 하다. 먼 여행을 갔다 오면 익숙한 경관이 눈에 들어오고 집에 가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곳이 바로 동네가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후 소위 '압축' 개발로 인해 누적되어 온 도시 문제, 예를 들면 구도심 쇠락, 불균형 발전, 공간의 양극화, 편의 및 녹지 공간 미흡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재생 뉴딜, 마을 만들기 등과 같은 소규모 재생 사업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 중이다. 이러한 해결 방안들의 목표는 모두 살기 좋은 동네, 살고 싶은 도시일 것이다.

한데 요즘에는 기존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전면 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의 구조적 틀을 유지한 채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동네 만들기 같은 도시 재생 방법들이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 역시 그동안 관, 다시 말해 행정기관이 주도하였다. 최소한의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 책임 및 평가에서도 주민은 제외되었다는 의미다.

관이 주도하는 재생 정책의 문제점을 몇 가지 들어 보면 먼저, 정부나 지자체의 많은 부처가 각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데 있다. 이를 총괄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복지 관련 부처는 '복지 마을'을, 문화 관련 부처는 '문화 마을'을 만든다고 정책을 수립하

는 것이다. 정작 해당 마을에서는 문화와 교육, 복지와 경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모두 소통 없이 '칸막이 행정'의 전형을 보인다. 다음으로 의미 없는 성과주의다. 행정은 항상 가시적인 성과에 골몰한다. 시민의 세금을 쓰니 그 세금을 헛되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공복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그 성과가 정책의 진정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눈에 띄는, 계량이 용이한 가시적인 양적 지표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공간을 짓거나, 참여자 숫자 등에 집착하다 보니 정작 행여야 할 정책의 질적 효과는 뒤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재생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과 지역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활동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일 상에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주민 자체의 노력, 골목·동네 등 물리적 환경을 고쳐나가는 데 행정기관·기업 및 단체 등의 참여, 이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각종 협정이나 프로그램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에게 동네에 대한 '의식'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동네 만들기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재개발 사업'이 아니다. 그 장소의 역사와 특성 및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함께하는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장소, 장소와 장소,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동네와 지역사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동네 만들기는 지역사회와 연동된다. 동네가 곧 전체 사회 시스템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 동네와 옆 동네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현재 광주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과는 동네에서 또 골목에서 힘겹게 해 온 많은 풀뿌리 주민 활동을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동네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 함께 밥을 먹고 책을 읽고 텃밭을 가꾸는 것부터, 아이를 같이 키우고 일자리를 나누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까지,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도시 재생은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뤄지는 '작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동네'에 있다고 생각한다. 동네를 점진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광주를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

법조칼럼



송창운 변호사

합리적 의심

은 아내인 니콜 심슨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 중 한 명은 '심슨이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는 입증을 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라고 인턴부했다.

그렇지만 이후 니콜 심슨의 유족이 O. J. 심슨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는 그의 살해 혐의가 인정돼 유족에게 배상금으로 총 3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70여 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2003년에 불이 난 차량에서 한 남자가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부검해보니 총격에 의한 심장 파열이 직접 사인이었다. 부인이 유력한 용의자였다. 경찰은 남편 이름으로 여러 개의 생명 보험이 가입돼 있고, 부인이 내연남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말을 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라 판단했다. 그리고 차에 불을 내는 데 쓰인 경우 통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자백이나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되었다. 총격에 의한 심장 파열이 직접 사인인데, 부인이 심장을 파열

시켰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지 않을까 싶다.

2년 뒤 여자는 남편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과 관련해 보험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 3000여만 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조정을 통해 보험사 한 곳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상대방들로부터는 3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부인이 남편을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유죄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대법원에 상고했는지,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언뜻 보면 모순되는 결과가 아닐 수 없지만, 이는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에서 입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형사 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합리적 의심은 일종의 허둠이다. 이를 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죄의 심증

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합리적 의심 원칙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다.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도 이와 같은 뜻일 것이다.

그렇지만 가끔 이 때문에 큰 도둑들, 큰 범죄자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글을 읽는 분들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 원칙 덕에 풀려난 도둑들이 때를 드는 경우, 말 그대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화가 난다.

처벌을 피한 도둑들이 피해자를 무고, 명예 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할 때가 바로 그때다.

도둑들이 고소라는 때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도 없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럴 땐 합리적 의심 원칙이 야속하면서 이런 생각도 든다. 당신의 무죄는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입증되었는가?

기고

'아파트 공화국'이 아니라 '단지 공화국'이다



나강열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출, 삶과 주거 양식의 획일화,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 양산, 주변 환경과 상충되는 난개발 확산, 아파트 면적으로 구분하는 사회 세대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비판의 근원으로서 아파트 자체가 문제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지만, '아파트 단지'를 원인으로 전환하면 다른 측면에서 갈등 구조 해결의 실마리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불패'라는 다소 선정적이고 예언적인 통념에는 그만큼 두터운 수요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왜 주민들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일까? 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는 역사적으로 기성 시가지의 열악한 도시 및 주거 환경에 기인한다. 협소한 도로, 공원·녹지 공간의 이용 제약, 이웃 간 갈등 요소인 주차 전쟁 등이 일반 주거 지역의 현주소다. 반면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면 놀이·공원·체육 단련 센터 등 편리한 공공 공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 공간과 개방감, 24시간 가동되는 안전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는 도시 주거 환경이 삭막한 사막에서 양호한 주거 서비스를 개인 비용으로 지불하고 이용하는 오아시스라고 볼 수 있다.

서구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을 통해 주거지와 연계하는 공공 시설을 확보하고 마을 내 다양한 것은 공간인 학교 시설과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하는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마을 내 커뮤니티 시설을 바탕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가능성이 높은 사회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국토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출 중심의 압축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으므로 마을 단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사업들은 후순위 정책이 되었다. 공공은 아파트라는 주택 상품을 이 시장에서 매매토록 하는 정책을 장려하였다.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여가, 휴식, 체육 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지원 정책은 미흡했다.

따라서 기성 시가지 내에 아파트 단지 와 같은 주거환경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아파트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처방일 것이다. 고층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전환할 경우, 신규 아파트 단지가 마을의 커뮤니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교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지 주변 담장을 지양하고 주차장 일부를 마을과 공유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서 말이다. 그리고 기성 시가지 내 보석 같은 공간인 학교 시설과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은 교류와 소통, 효율적 관리라는 관점에서 마을과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교육권 확보와 시설 안전성을 감안한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결국 아파트 선호의 수요를 다른 주택 유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 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생활 밀착형 SOC(사회 간접 자본) 사업은 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와 같은 기능들을 기존 마을에 도입하는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자족적인 기능이 마을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주민 편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그리고 시민의 자율적인 도시공간 관리에 보다 많은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응축되어 사회 트렌드와 조응할 때 우리 도시와 마을들은 '단지 공화국'에서 비로소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불안한 한빛원전 자치단체도 견제 나섰다

영광군이 한빛원전 가동에 영광 지역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허가를 내줬다. 지금까지는 통상 4년 이상 연장을 허가했지만 한빛원전 1호기의 출력 급상승 사건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이 커지자 강한 견제에 나선 것이다.

영광군은 옛그제 한빛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냉각해수 공역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향후 2년간 영광 지역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일단 2021년 5월까지 한빛원전 여섯 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연간 115억 8000만 톤의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당초 한수원이 2042년까지 23년간 바닷물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영광군은 한빛원전 1호기 출력 급상승으로 지역민들이 '즉각 폐쇄'를 요구할 정도로 불안감이 극심하고, 온배수로 인

한 어장 황폐화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점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한수원은 지난 2015년에도 30년간 해수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영광군은 어업 피해 등을 들어 4년간만 허가했다. 당시 한수원은 군의 조치에 반발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처럼 바닷물 사용 기간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원전 측이 사고와 고장에도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사후 대책 또한 부실했기 때문이다.

한빛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다 소나마 회복하는 길은 최근 발생한 1호기의 출력 급상승 사건을 정부가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달려 있다. 감독 부처인 산업자원통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원전 규제 체계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 내용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정부 지원 확인 '완성차 공장' 차질 없도록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등을 언급하며 '광주가 꿈을 이루도록 정부가 함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모두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 단지에 들어서게 됐다"며 "민주주의를 지켜 낸 광주는 이제 경제 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됐다"고 말해 광주 시민들을 뿌듯하게 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가 본격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도 투자자를 모집해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법인을 만들어 올 하반기에 공장 착공에 들어가야 하지만 기대했던 투자자 및 투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이 국가사업으로서 정부 지원의 근거 마련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에서 면제되면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근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처럼 심의·의결한 것이다.

광주시가 빛그린 산단 내에 건립할 완성차 공장에 투자하는 규모는 483억 원으로,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보통 3~4개월이 소요되는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엔 투자 심사 단계가 안 됐을 경우를 상반기 합작법인을 설립하려면 광주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었다.

하지만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이 제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중앙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재확인한 만큼 광주시 또한 완성차 공장 사업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다른 종교인들의 신앙을 배운다고 우리 신앙이 없어진다면 그 정도의 신앙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자기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그릇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담아내야 한다." 강원용 목사(1917~2006)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종교 간 대화 운동이다. 1963년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설립한 고인은 교단 내 벽을 허물고, 종교 간 화합의 시대를 연 선각자였다.

강원용 목사 외에 김수환 추기경(1922~2009)과 법정 스님(1932~2010)도 종교에 대한 열린 시각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합장(合掌) 논란

귀감을 보여 준 정신적 지도자들이다. 서울 김삼사 개인법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던 김수환 추기경과 명동성당의 가톨릭 신자들이 상대로 무소유의 정신을 설파했던 법정 스님의 일화는 익히 알려진 얘기다. 이들 세 종교 지도자들은 저마다 나이와 믿음은 달랐지만 함께 종교 화합을 위해 진력했다.

부처님 오신 날 묘사할 법요식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합장(合掌)을 하지 않아 적잖은 논란을 낳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대표는 전도사

자격증이 있는 특이한 이력의 정치인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오로지 나만의 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자 한다면 공동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한 국가독교총연합회는 "정당 대표에게 자연인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표를 가지고 정당 대표마저 좌지우지하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말을 했다. 이후 불교 행사를 샀다. 이후 불교 행사에서는 합장을 거르지 않을 만큼 성

난 불심 달래기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도 '남이 믿는 종교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이념적·종교적·정치적인 분열은 물론 세대 및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내 생각만 옳다는 주장은 독선과 편협을 넘어 극단주의로 치달을 수 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사랑과 자비다. 합장 논란보다 사랑과 자비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본질적인 부분이다.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정취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FAX 222-8005)	(FAX 222-0195)
경제부 220-0663	에디팅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업무국	220-0551
전남본부 220-0642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